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변혁하자!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2024년 10월 19일



<https://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제3차 세계대전 획책하는 미·서구 제국주의 타도하자!

한강 씨의 노벨문학상 수상, 마땅히 온 나라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무의미한 전쟁과 그것이 수반하는 학살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과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천6백만~2천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전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강대국인 제국주의 국가들 상호간에 식민지를 더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 정치경제 패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비롯한 광대한 신식민지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그런 추악한 목적을 위해 수천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는 그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내닫고 있습니다. 엠마뉼엘 토드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겸 역사학자는 2022년 여름에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미·서구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의 말이 사실 아닙니까? 미·서구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세계패권이 브릭스(BRICS)로 상징되는 후발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흔들리자 이를 물리치고자 제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춰라! 제5차 중동전쟁을 멈춰라!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서아시아)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또한 2023년 10월 발발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

금에 와서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꼭두각시로 앞세운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이란을 비롯한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을 파괴하고자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한편으로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독점하고 그 몫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제국주의의 일대일로를 가로막고 인도-중동-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회랑(IMEC)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영토 쟁탈전입니다. 이런 추악한 목적을 위해 두 차례의 대 이라크 전쟁으로 5십만여 명을 죽인 것도 부족해, 시리아에 전쟁을 일으켜 5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낸 것도 부족해, 가자지구에서 5만여 명의 민간인을 죽인 것도 부족해, 레바논·예멘·이라크·시리아·이란과 제5차 중동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동참하는 보수양당 독재 타도하자!

얼마 전 무인기가 평양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침투해 빠라를 살포했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심중팔구 남한 수구세력이 했습니다. 왜 그런 도발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그의 취임 열흘 만에 미 대통령 바이든이 방한하여 깊숙하게 안보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일 준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인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동맹입니다. 동아시아에 아시안 나토를 만들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전쟁은 쇠퇴하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전쟁은 수명을 다해가는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런 추악한 이해관계로 일본 자민당 정권과 한국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권이 이를 배후에서 추동하고 있습니다.

미·서구 제국주의의 제3차 세계대전 기획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윤석열 정권과 그 기획에 침묵으로 방조하는 보수양당은 모두 타도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노동자·민

중의 권력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전 지구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 보수양당독재 타도하자!

“나 잡아봐라” 계속 뛰는 서울 집값, 상승률 3년 만에 최대, “이러니 다들 서울에 집 사지”...서울-지방 집값 더 벌어졌다.’ 지난 7~8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보도했던 기사 제목들입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해 왔습니다. 더구나 내수를 진작한다며 10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영끌을 부추겨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임금은 인상되지 않아서 실질임금은 정부 통계로도 2022년 0.2%, 2023년 0.4%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실질적인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평균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5만3천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물가 급등에다 실질임금 저하와 실업 증가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여야 보수양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양당은 정쟁으로 죽일 듯 싸우면서도 독점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기꺼이 합작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자 감세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수양당 권력분점과 독점을 깨뜨리지 않고는 민생파탄을 멈추게 할 수도 민생파탄의 원흉인 독점재벌을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넘어 보수양당 독재를 타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월 100만원 지급하라!

‘노인빈곤율·노인고용율·노인자살률 세계1위’, ‘폐지 좁는 노인 4만2천명’, ‘폐지 주워 월16만원 벌어’,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의 현주소입니다.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면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노인 월 최저생활비 기준인 월 12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70%를 넘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폐지 좁는 노인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

더구나 100세 시대로 들어서며 고령층이 증가하고 독거 노인이 급격히 늘었는데 부모봉양이 어려운 자식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노인소외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현 국민연금으로는 노인빈곤과 자살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입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기초연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대 지급액이 월 30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월 100만원은 되어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과 중산층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의원·병원 국영화·무상화 실시하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 계속되며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 사회의 의료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니다. 의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직업’으로 고소득에 특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 케어라며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그래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의료수요만 많아져 의사들이 쉽게 처방 내리는 과잉진료만 만연해졌습니다. 비급여 치료가 줄기는커녕 실손보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병원, 의사, 보험회사만 배 불리고 노

동자·민중들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중으로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속셈은 의료영리화의 확대입니다. 재벌들이 재단을 통해 대형 병원을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병원의 영리추구가 노골화되면서 의료 또한 양극화되어 동네의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료개혁은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끔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처럼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 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의료기관의 소유와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국영의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이미 국영의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들 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1948년에 무상의료를 헌법에 명시했지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우파가 장기집권하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가 68혁명으로 노동자·민중이 떨쳐나서자 좌·우 정치세력인 공산당과 기민당이 타협하여 국영의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을 개정해서 공공·무상의료를 국민의 권리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병원 국영화·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977.6.28,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 베를링구에르(왼쪽)와 기민당 대표 모로(오른쪽)가 의료보험제도 개혁안 합의 후 악수 하는 모습.

전·월세 몰수하여 주택 재분배 실시하라!

주택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주택문제가 심각합니까? 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가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그들이 가진 주택숫자만큼의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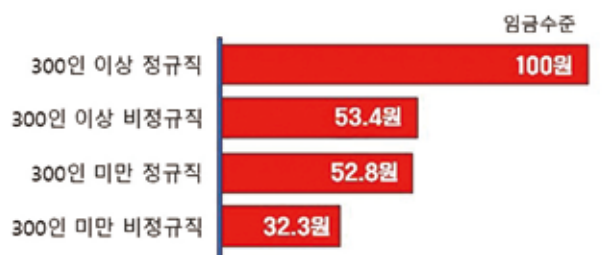
따라서 주택문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 재분배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방 후 토지개혁을 하던 당시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했듯이, 거자유택의 원칙 하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을 몰수해 재분배해야 합니다.

주택문제의 또 하나는 집값이 턱없이 비싼 것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것은 땅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값을 잡으려면 땅의 사유에 의한 지대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택지를 국유화해서 싼 값의 땅을 공급해야 싼 값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서민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를 보면 주택 자가보유율이 90%가 넘는 주택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택 자가소유'를 목표로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국토를 국유화해서 싼 값의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와 거래를 정부산하의 '주택개발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택 매매가 재테크와 투기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주택 정책, 싱가포르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독점재벌 해체하여 노동내부 불평등 타파하자!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2023년 기준)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에서 작성.
* 300인 이상 정규직임금을 100원이라 가정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53.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차별만 주목하고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52.8%에 불과하고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보다도 적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또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약 60% 수준이고 대기업 정규직에 비하면 32.3%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표는 임금 불평등이 극심하고 그것

의 많은 부분이 어떤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벌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는 임금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위 '루저'로 취급받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에 민감한 청년의 경우, 이런 차별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우울증 발병이 증가하면서 청년자살이 늘고 있는데 이중 여성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빚까지 내어 스펙을 쌓느라 사회진출도 늦어질 뿐 아니라 청년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내부 불평등의 원인은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종속시키고 생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며 하청단가와 하청노동자 임금을 후려쳐서 초과착취하고 수탈해 온 독점재벌에게 있습니다. 독점재벌의 중소기업 초과착취로 재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괴물 불법기업 집단인 독점재벌을 해체해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노동내부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노동악법 철폐하여 모든 노동자 기본권 보장하자!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체노동자의 12.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20만 이상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동자 수에 포함하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노조조직률은 사실상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입니까?

그러면 왜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렇게 낮습니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노동법이 오히려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파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단결의 자유는 있습니까?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악법을 이용한 자본(원청을 포함)의 온갖 방해와 탄압으로 노조를 결성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은 일제 식민지 해방운동과 노동운동 세력을 탄압했던 치안경찰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은 또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활동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정치파업이 불법화되어 있어 정부가 나쁜 법과 정책을 시행해도 노동자는 이에 맞서

투쟁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수없이 정치파업이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데 말입니다. 이런 파쇼 노동악법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민주화했다고 하지만 보수양당이 정치권력을 독차지하며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악법을 유지시켰고 일부는 더 개악했습니다.

민생파탄, 사회양극화 주범 독점재벌 해체하라!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계속되자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그 여파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높아졌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경기도 침체하여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자 10월 11일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0.25%p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또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계부채 규모가 무려 2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기업부채 규모가 2천73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에 이어 6월에는 한 해 동안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무려 10곳 중 4곳이라는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영세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원흉이 누구입니까. 한국 사회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재벌 아닙니까. 총수 일가가 소유·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독점재벌은 건설에서 병원, 대학까지, 4대재벌이니 10대재벌이니 30대재벌이니 하면서 나라의 경제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과 특혜를 주고받는 부정축재에서 생겨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탈법적으로 노동자를 초과착취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과 소비자대중을 초과수탈하고,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지배력은 이제 정권도 손쓸 수 없습니다. 이 독점재벌을 해체시켜 개별 대기업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양극화된 소득 분배는 결코 평등하게 될 수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재벌 덕택에 이만큼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강변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로 이처럼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재벌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된 것입니다. 이런 독점재벌을 해체하지 않고는 민생파탄도, 사회양극화도, 경제위기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